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규명 강력 촉구

이명박 정부 관여 사실에 민주·국민·정의당 "책임처벌·진상규명"... 자유당 "문제 있으면 정리될 것"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이명박 정부가 깊이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국정원의 적폐청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보고서를 강요하면서 검찰 수사 등 책임처벌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있으면 정리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TF(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 여론조작팀'을 가동, 3500명의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 팀은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며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일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3500명 동원한 국정원 댓글공작은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적폐청산 TF 13개의 제 중 한 부분의 일부 내용만 드러난 것으로 비산의 일각임에도 매우 경건동지할 내용"이라며 "국정원법을 위반해 가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호도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은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국정원이 세금으로 민의 왜곡위반 '반(反)국민'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해 복부하는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로 활약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명백한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련 금지



안철수 정계 은퇴 선언하라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에 대해 논평하며 "결국 반정부 여론에 쫓겨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정원의 탈법적인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하의 국정원의 임무가 '국내정치개입과 선거조작을 위한 헌신'이었는지 묻는다"며 "이명박 청와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진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국정원의 용서할 수 없는 위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꼭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실에 분개하면서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향후 활동을 응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다"며 "국정원을 매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정석 의원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진상을 모조리 밝히고 관련자들과 그 배후를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 그보다 앞서고 중요한 건 안보 특히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물론 국정원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양 가장 전면에 앞세우면 더 중요한 것들이 뒤로 쳐지면서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전두환 회고록·지만원 화보 출판·배포 금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이날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가 이날부터 금지됐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흔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잠깐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민변과 광주지방법변호사협회는 회고록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위촉 확정 판결문, 5·18 최초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5·18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5·18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들은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뉴스

이은재 "부동산 대책, 강남 겨냥 분풀이 포폴리즘"

강남이 지역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병)은 4일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가 아닌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폴리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어야 한다. 누구도 오래돼 낡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강남의 3, 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뜰까이는 또 다른 이유는 문제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강남 8학군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게 하는 불씨를 당겼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문제인 정부는 강남과 서울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수도권 중심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만큼 여러 면에서 주택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주택시장의 다양성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투기억제정책을 쏟아내며 서울, 특히 강남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서울과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폴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차원의 부동산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육군, 공관 90곳 공관병 전수조사

조사인력 20여명 투입

육군은 4일 최근 갑질 피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공관병의 운영실태 확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주일간 공관 90곳의 공관병 100여명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육군은 이날 "이번 조사는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가

대상"이라며 "감찰·인사·편제·법무·헌병전문요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통합점검팀을 편성해 인권침해,사적용용, 기본권 보장,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조사대상은 공관 90개소, 공관병 100여명"이라며 "지역별로 나눠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1주일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통일부 "한미 양국, 북핵 관련 긴밀히 공조"

통일부는 4일 한미 양국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핵,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

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만 교육
지난 4일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주,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명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반은 매일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